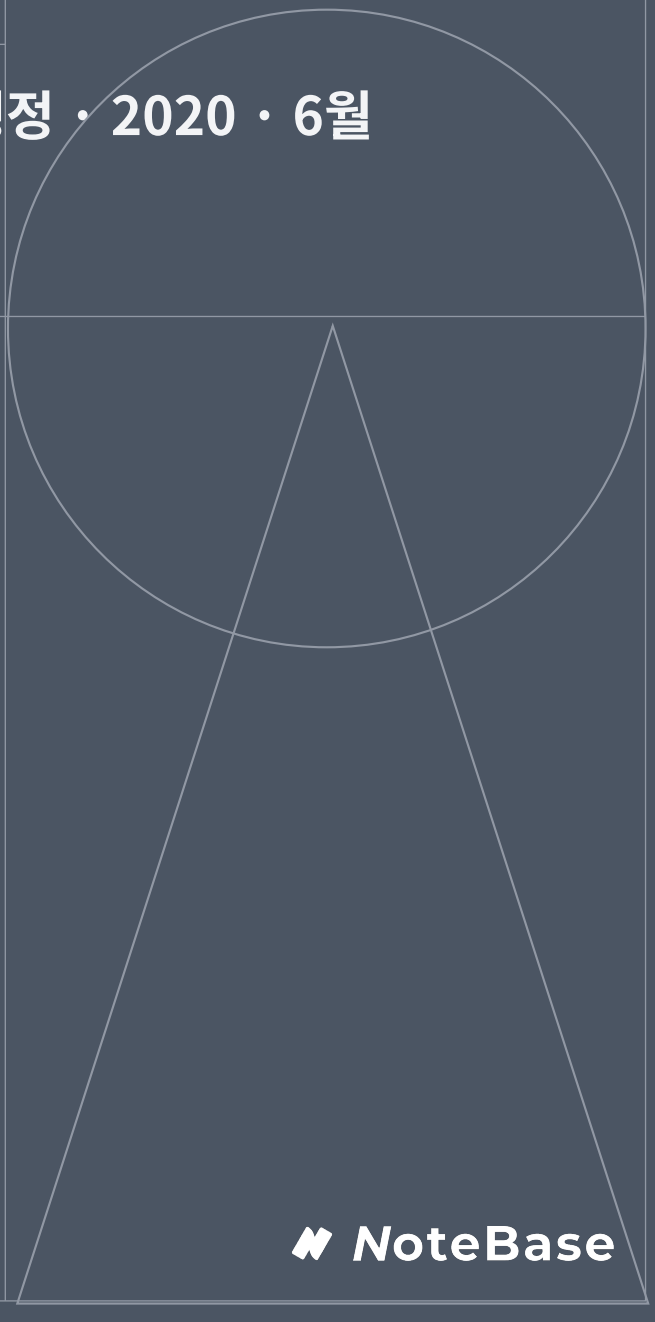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보건행정 · 2020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보건행정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보건행정 · 2020 · 6월

문 1. 공중보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질병을 치료하고 장애의 중증도를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②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③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행동을 실천한다.

④ 단일 조직의 전문적인 활동이 강조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질병의 치료와 장애 중증도 감소는 이미 발생한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공중보건은 이러한 활동도 포함하지만, 중심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있으므로 치료와 장애 감소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X: 개인의 건강행동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강조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개선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③ O: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하면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건강행동의 실천은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환경 개선과 건강행동 실천**은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의 의미에 부합한다.

④ X: 공중보건은 환경, 생활습관,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을 다루므로 단일 조직의 전문 활동만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보건기관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학교, 지역사회 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여러 부문의 협력**이 강조된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두제
ㄴ. 포괄수가제
ㄷ. 총액계약제
ㄹ. 행위별 수가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의 종류와 양이 늘수록 보상액이 증가**하므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보다 진료비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다.

보기별 해설

ㄱ. O: 인두제는 일정 기간에 등록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등록자에게 진료를 더 많이 제공해도 보상액이 그에 비례해 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있다.

ㄴ. O: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질병군의 진료에서 검사나 처치를 늘려도 그만큼 추가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진료 건당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생긴다. 불필요한 검사나 입원기간 연장을 줄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ㄷ. O: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측이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이다. **지출 총액을 미리 정해 관리**하므로, 적용 대상 부문의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ㄹ. X: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개별 진료행위의 가격과 제공량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량을 늘리면 수입도 증가**하므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의료비 상승 억제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제도에 해당한다.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제도는 ㄱ·ㄴ·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왕실의 내용(內用) 및 사여(賜與) 의약을 담당하며 의학교육과 의과취재 등의 일반 의료행정을 수행한 조선시대 중앙의료기관은?

① 내의원
② 전의감
③ 활인서
④ 혜민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의감은 왕실에서 쓰거나 신하에게 하사하는 의약의 공급과 함께 **의학교육과 의과·취재** 등 일반 의료행정을 담당했다.

핵심 풀이

전의감: '내용(內用)'은 왕실에서 쓰는 것을, '사여(賜與)'는 임금이 신하 등에게 내려 주는 것을 뜻한다. 전의감은 이러한 의약의 공급을 맡았으며, 의학생을 교육하고 의과와 취재를 담당하여 의료인력을 양성·선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따라서 **의약 공급과 일반 의료행정을 함께 담당**했다는 단서가 전의감에 해당한다.

내의원과의 구분: 내의원은 **국왕과 왕실 가족의 진료**를 중심으로 의약 업무를 맡았다. 문항은 왕실 관련 업무에 더해 의학교육과 인력 선발까지 제시하므로, 전의감의 포괄적인 의료행정 기능을 묻는다.

NoteBase

문 4. 공무원의 임용방식 중 실적주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균등

② 정치적 중립

③ 공무원 신분의 보장

④ 정실주의, 자격주의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정실주의**는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를 임용 기준으로 삼으므로 실적주의에 어긋난다. 실적주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격주의 자체는 실적주의와 부합한다.

선지별 해설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관리를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자격·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원칙이다.

① O: 실적주의는 일정한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직에 지원하고 경쟁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출신이나 연고에 따른 특혜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② O: 실적주의는 인사와 직무 수행에서 **정치적 영향과 당파적 편향을 배제**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보다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시하고,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O: 실적주의는 공무원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징계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정실주의는 개인적 친분이나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므로 실적주의에 어긋난다. 실적주의의 임용 기준은 **능력·자격·실적**이다. 따라서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중시하는 자격주의는 부합하지만, 정실주의까지 함께 제시한 부분은 부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은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100명 이상 3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정답 2번

①

보건진료소는 **군수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읍·면 지역에 설치·운영**한다. 시·구 관할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 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 ·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면허 요건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이다. 해당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NoteBase

④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이다.
현행 규정에는 인구 하한 기준이 없으므로 '1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다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 ·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3.6.26>

NoteBase

문 6.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체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건강권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다.
·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이며 재원은 조세에서 조달된다.

① 공적부조형
② 복지국가형
③ 의료보험형
④ 국민보건서비스형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고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국민보건서비스형의 특징이다. 보기의 무상 제공은 의료 이용 시 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없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핵심 풀이

국민보건서비스형은 의료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국가가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기의 '건강권의 보편화'와 '전체 국민'은 보편적 보장을, '조세에서 조달'은 국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조세 중심의 재원 조달과 무상 제공 원칙**이 국민보건서비스형을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의료보험형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의료보험형은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조세 중심의 국민보건서비스형과 구별된다.

공적부조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보편적 보장과 다르다.

복지국가라는 포괄적 지향보다 재원과 서비스 제공 원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민보건서비스형에 주목해야 한다.

보기의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는 이 유형의 무상 제공 원칙을 단순화한 표현이다. 실제 영국 NHS에서도 일부 처방약이나 치과 진료에는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모든 국가의 모든 서비스에 예외 없이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7. 보건정책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문제의 인지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대안의 선택 → 환류
② 대안의 선택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문제의 인지 → 환류
③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문제의 인지 →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대안의 선택 → 환류
④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문제의 인지 → 대안의 선택 → 환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건정책의 대안을 만들려면 먼저 **해결할 문제를 인지**하고 그 원인과 실태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대안은 비교·평가한 뒤 선택하며, 시행 결과는 **환류**를 통해 이후의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올바른 순서

문제의 인지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대안의 선택 → 환류

문제의 인지: 주민의 건강이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문제를 인지해야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해결책을 검토할지 정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인지한 문제의 규모·원인·영향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조사한다. 이 분석은 문제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근거가 된다.

대안의 작성 및 평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예상 효과·비용·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한다. **대안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중에서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대안의 선택: 앞 단계의 비교·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대안을 결정한다. 정보 분석이나 대안 평가에 앞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과정을 거쳐 선택의 근거를 갖춘다.

환류: 선택된 정책을 시행한 결과와 평가 내용을 이후의 정책결정에 되돌려 반영한다. **목표 달성 여부와 새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NoteBase

문 8. 일차보건의료의 4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ccessible: 소외된 지역 없이 보건의료활동이 전달되어야 한다.

② Available: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Acceptable: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Affordable: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vailable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가능성**을 뜻한다. ②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은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이용가능성의 의미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Accessible은 접근성을 뜻한다. 거주 지역이나 이동 거리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X: Available은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할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과학적 타당성은 제공 방법의 성질이고, 이용가능성은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③ O: Acceptable은 수용성을 뜻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이 **지역사회의 문화·관습·가치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도 주민이 거부한다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O: Affordable은 비용부담 가능성을 뜻한다. 개인과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이용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9. 앤더슨 모형(Anderson model)에 따른 개인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료인력과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②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

③ 강화 요인(reinforcing factor)

④ 필요 요인(need factor)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료인력·시설의 분포와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 요인**이다. 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필요를 실제 이용으로 이어 주는 자원과 조건에 해당한다.

개념 구분

가능성 요인: **의료 이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조건**이다. 의료인력·시설의 분포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지에,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시된 두 사례는 모두 의료서비스 이용을 뒷받침하는 가능성 요인에 해당한다.

소인성 요인: 연령·성별, 교육·직업, 건강에 대한 신념처럼 **의료 이용 성향에 영향을 주는 배경 특성**이다. 이용할 자원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능성 요인과 구별한다.

필요 요인: 증상이나 질병의 중증도처럼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낸다. 개인이 느끼는 필요와 의료전문가가 평가한 필요를 포함한다. 같은 치료 필요가 있어도 건강보험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의 유무에 따라 실제 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구분한다.

강화 요인: PRECEDE-PROCEED 모형에서 가족·동료의 지지나 칭찬 등 **행동을 지속하도록 뒷받침하는 반응**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앤더슨 모형의 기본 구분인 소인성·가능성·필요 요인과 혼동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브라이언트(Bryant)의 건강문제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제의 크기

② 문제의 심각도

③ 주민의 관심도

④ 지역사회의 역량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역사회의 역량은 브라이언트의 건강문제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구별해야 할 기준은 현재의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제의 크기는 해당 건강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한다. 환자 수나 발생률·유병률 등으로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다.

② O: 문제의 심각도는 건강문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뜻한다. 사망·장애의 정도나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므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보는 문제의 크기와 구별된다.

③ O: 주민의 관심도는 지역주민이 해당 건강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해결을 원하는지**를 뜻한다. 전문가가 판단한 문제의 심각도와 주민이 체감하는 관심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으로 살핀다.

④ X: 지역사회의 역량은 브라이언트의 네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주민의 관심도와 함께 포함되는 기준은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다. 이는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로 해당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하는 역량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한 사람의 상관이 몇 사람의 부하를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직무의 성질, 시간적·공간적 요인, 인적요인을 고려한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조정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전문화의 원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상관 한 사람이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다루므로 통솔범위의 원리에 해당한다. 이 범위는 직무의 성질과 시간적·공간적 조건, 상관과 부하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풀이

통솔범위의 원리는 상관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의 부하를 맡겨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기>의 '몇 사람의 부하를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가'는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를 묻는 표현이다.

적절한 통솔범위는 모든 조직에서 일정하지 않다. 직무가 복잡하거나 부하들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으면 감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의 성질, 감독에 쓸 수 있는 시간, 공간적 거리, 상관과 부하의 능력 같은 인적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 한 사람이 한 명의 직속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로, 여러 상관의 지시가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통솔범위가 **상관 한 사람당 부하 수**를 다룬다면, 명령통일은 **부하 한 사람의 명령 계통**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보건행정 · 2020 · 6월

문 12. <보기> 중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립재활원
ㄴ. 국립암센터
ㄷ. 국립중앙의료원
ㄹ.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ㄱ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ㄴ

국립암센터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ㄷ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NoteBase

ㄹ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NoteBase

문 13. 예방접종과 관계가 깊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부효과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수요의 불확실성

④ 공급의 법적 독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전파가 줄면 접종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보호받는다. 이처럼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개념 구분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소비나 생산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편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전파가 줄어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도 낮아지면, 접종자 개인의 편익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생긴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료인과 환자가 가진 정보의 차이, 수요의 불확실성은 질병 발생 시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미리 정확히 알기 어려운 성질, 공급의 법적 독점은 면허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성질이다. 이들은 각각 정보·예측·공급 자격에 관한 특성으로, 예방접종의 **편익이 제3자에게 미치는 현상**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4. 「의료법」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급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②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이 필요하다.

③ 1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필수진료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4번

①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의 9개는 법정 최소 진료과목 수와 다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지만, **치과병원에는 3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NoteBase

③

치과가 필수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기준은 **300병상 초과**이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는 치과 설치가 필수는 아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④

종합병원은 병상 규모에 따라 정해진 **각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NoteBase

문 15.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이 아닌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②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

④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브룸의 기대이론은 욕구의 종류보다 **노력·성과·보상이 연결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과정이론이다.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 보상의 주관적 가치로 동기부여를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내용이론은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욕구나 요인이 무엇인지에, 과정이론은 동기가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아래 O/X는 각 이론이 '내용이론에 해당한다'는 진술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① O: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내용이론이다.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람을 움직이는 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둔다.

② O: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은 내용이론이다. 인간은 수동적·의존적인 미성숙 상태에서 능동적·독립적인 성숙 상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구성원의 성숙에 따른 **자율성과 성장 욕구**를 조직이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의 내용에 주목한다.

③ X: 브룸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다.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기대감',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수단성', 보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인 '유의성'으로 동기부여를 설명한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분류하기보다, 개인이 노력의 결과와 보상의 가치를 판단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④ O: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은 내용이론이다. 성취·인정·직무 자체 등은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이고, 급여·근무조건·회사 정책 등은 불만과 관련된 위생요인이다. **위생요인의 개선은 불만을 줄이지만 그 자체로 높은 만족과 동기부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며, 동기요인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16.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① 본예산
② 가예산
③ 준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정답 3번

공통 해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한 경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집행 대상은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정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 이론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본적인 방향의 설정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세부적인 문제의 결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약간 향상된 대안을 탐색하는 현실적인 모형

① 최적모형
② 혼합모형
③ 합리모형
④ 점증모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근본적인 방향은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사항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개선하는 **혼합모형**의 설명이다. 결정의 수준에 따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접근을 함께 사용한다.

핵심 풀이

근본적인 방향의 설정: 정책의 전체적인 목표와 주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큰 방향을 정한다. 보기에서 관련 사안을 분석·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부분은 **합리모형의 접근**을 나타낸다.

세부적인 문제의 결정: 정해진 큰 방향 안에서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소폭 개선할 대안을 탐색한다. 이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점증모형의 접근이다.

모형의 구분: 혼합모형은 근본적인 결정에는 합리적 접근을, 세부적인 결정에는 점증적 접근을 결합한다. 보기의 앞부분만 보면 합리모형, 뒷부분만 보면 점증모형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두 결정 방식을 구분하여 함께 적용한다는 점이 혼합모형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NoteBase

문 18. 베버리지(Beveridge)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리지의 원칙에는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등이 있다.

②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신분과 수입에 상관없이 전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대상분류의 원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은 **행정책임 통일의 원칙**으로 고쳐야 한다. 사회보험의 기여금 징수와 급여 지급 등 행정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베버리지의 여섯 원칙은 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책임 통일, 급여 적절성, 포괄성, 대상분류이다. 이 중 행정책임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해야 한다.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통합된 행정체계에서 처리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② O: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적용 대상과 보장하는 필요를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이나 소득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이 필요한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도 함께 포괄한다.

③ O: 대상분류의 원칙은 전 국민을 포괄하되 **생활 형태에 따른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아동, 은퇴자 등은 소득을 얻는 방식이나 필요한 보장이 다르므로 각 집단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한다. 이는 신분이나 소득에 따라 특정 집단을 사회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다.

④ O: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급여가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 다른 소득이나 추가 지원이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급여 자체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NoteBase

문 19. 보건의료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건의료인력

② 보건의료시설

③ 보건의료지식

④ 건강보험재정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건강보험재정은 보건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지원**에 해당한다. 이 문항의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분류에서는 인력·시설·지식 등의 보건의료자원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건의료인력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방·진단·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자원**에 해당한다.

② O: 보건의료시설은 병원·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시설을 뜻한다. 보건의료활동을 수행하는 기반인 **물적 자원**에 해당한다.

③ O: 보건의료지식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에 활용되는 지식이다.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물품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원**에 해당한다.

④ X: 건강보험재정은 보건의료자원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해당한다. 인력·시설·지식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자원이라면, 건강보험재정은 그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의 비용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이지만 보건의료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라인-스태프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태프 조직은 실질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가진다.

② 조직이 대규모화 되면서 업무 조언을 위한 기능이 설치된 조직이다.

③ 스태프는 라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④ 라인과 스태프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스태프는 라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조언·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조직의 본래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지휘·명령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라인**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라인은 조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지휘·명령권을 가진다. 스태프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라인을 보좌하므로, 원칙적으로 **라인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은 없다**. 선지의 권한은 스태프가 아니라 라인의 특성이다.

② O: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 라인만으로 모든 전문적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스태프 기능**을 두는 것이 라인-스태프 조직이다.

③ O: 스태프는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라인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스태프는 **라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④ O: 스태프의 조언이 실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라인의 집행·명령 기능과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지가 모호해져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